

트럼프는 “국빈”이 아니라 호전적 제국주의자다! 11월 4일 트럼프 방한 반대 행동에 참가하자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
필요하다

3면

생리대 안전 대책
마련하라

8면

추수주의란
무엇인가?

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연합도, 영국도
진보적이지 않다

4면

국제
카탈루냐 독립 투쟁
오스트리아 총선 결과
영국의 새로운
인종차별주의 운동

2, 4면

한국GM
부실과 경영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6~7면

오스트리아 총선

나치의 정부 입각, 세계에 경고를 보내다

10월 15일 오스트리아 총선 결과는 지난해 말 대선과 마찬가지로 긴급한 경고를 보낸다. 바로 나치의 성장에 맞서야 한다는 경고이다.(관련 기사: ‘오스트리아 대선: 반파시즘 운동이 나치의 당선을 막다’, <노동자 연대> 188호)

1위는 31.7퍼센트를 득표한 중도우파 국민당(OVP)이다. 2위는 26.7퍼센트를 득표한 중도좌파 사민당(SPÖ)이고, 3위는 26.5퍼센트를 득표한 나치 자유당(FPÖ)이다.

사민당이 겨우 0.2퍼센트포인트 차이로 2위를 했지만 이번 선거는 사민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었다.

사민당은 2013년 총선에서는 1위를 해 주도적으로 정부를 운영했으나 별다른 개혁을 제공하지 못했다. 또,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맺어 현 국민당 대표 세바스티안 쿠르츠를 외교부 장관에 앉혔다. 그가 이슬람 혐오적 법률인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발의·시행하는 등 인종차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최근 사민당의 지도적 인물이자 현 총리 크리스티안 케른은 오스트리아 정치가 “크게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꾸짖었는데, 사실 그 자신과 사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공식 정치가 우경화하면서 범우파의 득표가 늘었다(국민당과 자유당을 합쳐 약 14퍼센트포인트 증가).

또, 그 흐름 속에서, 그리고 주류 정당들의 인종차별 부추기기에 힘입어 자유당의 득표도 2013년 총선보다 거의 6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다.

자유당은 나치 정당이다. 자유당 설립자의 한 명인 안톤 라인탈러는 나치



“나치는 꺼져라” 10월 15일 자유당의 정부 입각에 반대하는 시위

정부 시절의 장관 출신자이자 친위대(SS) 장교였던 자다.

물론 자유당은 당 이미지를 ‘세탁’하려 한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당의 핵심에는 나치가 있다. 지난달 나치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단체가 2013년 이후 일어난 유대인 차별적, 인종차별적 사건 목록을 공개했다. 그중 60건 이상에 자유당 인사들이 연루됐다.

총선에서 1위를 한 국민당 주도의 연립정부에 자유당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인종차

별 반대 활동가들은 나치가 정부에 입각하는 것에 항의하는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중도좌파 정당인 녹색당은 득표가 폭락했다. 2013년에는 12.4퍼센트를 득표한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는 3.6퍼센트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올해 5월 녹색당은 청년조직을 축출했다. 축출된 청년들은 공산당과 연합을 맺어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오스트리아의 총리가 될 세바스티안 쿠르츠는 난민의 입국을 차단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해 왔고, 이제는 무슬림 유치원을 금지해야 하고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뿐 아니다. 부자와 기업들에게 감세를 해 주겠다고도 한다.

우파 정부의 친기업·인종차별 정책과 나치의 성장에 맞서는 강력한 운동이 필요하다.

차승일

영국

새로운 인종차별적 우익 운동의 등장

영국 노동당의 좌파 대표 ‘제러미 코빈이 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장악했다’(〈노동자 연대> 223호)는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매우 상반되고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새로운 인종차별적 우익 운동이 등장한 것이다.

그것은 ‘축구 사나이 연맹’(FLA: Football Lads Alliance)이다. FLA는 10월 7일 런던에서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사진)을 벌였다.

결성 초기 단계이고 공식으로는 “극단주의에 맞서 단결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에, 꽤 많은 영국인들이, 그리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조차 FLA를 인종차별적 조직으로 보지 않는 듯하다. 꽤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정부가 테러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항의하러 나왔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FLA 집회의 핵심 메시지는 이슬람 혐오적이고 인종차별적이었다. 나치도 대거 참석했다. 그중에는



‘축구 사나이 연맹’의 핵심에는 이슬람 혐오와 인종차별이 있다

극우 거리 운동 조직이었던 영국수호동맹(EDL)의 지도자였던 토미 로빈슨이 있다. 그는 내빈 대접을 받으며 대열 선두에 서서 행진했다.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그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FLA의 창립자 존 메이건은 테러 용의자는 모두 추방해야 한다고 연설했

다. 그가 말하는 “테러 용의자”는 실제의 용의자뿐 아니라 백인이 아닌 사람 모두를 뜻했다. “우리는 영국 시민이 아닌 사람 모두를 테러리스트로 의심한다. 그들을 우리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집회에서 큰 환호를 받은 또 다른 연설은 퇴역 군인 조직의 연설이었다.

“이 나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 위협은 이슬람 지상주의와 지하드(성전)주의이다.”

요컨대, FLA는 여러 모로 극우 거리 운동 조직이었던 영국수호동맹과 닮았다.

FLA의 등장은 얼마 전 독일 총선에서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이 약진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관련 기사: ‘우려스러운 독일 극우의 총선 승리’, <노동자 연대> 223호)

또, 제러미 코빈의 선명한 좌파적 주장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이런 우익 조직이 등장한 것은 영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영국의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운동은 여러 차례 나치와 우익 포퓰리즘 운동을 패퇴시켜 왔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주장처럼 나치를 고무할 수 있는 FLA의 성장을 심각하게 여기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차승일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10월 11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10월 중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 인정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말이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5차례나 반려했다. 박근혜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정부의 요구대로 규약을 개정했음에도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뒤뚱수를 쳤다. 우파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며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며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따라서 촛불 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별법 거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공무원노조법(특별법)’은 노동3권 중 1.5권(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일부)만 인정했다. 당시 공무원노조는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투쟁했다.

노무현 정부는 투쟁하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내몰고 무장한 용역강패와 경찰을 동원해 노조 사무실 140곳을 폐쇄하기도 했다.

이런 저항의 역사를 알기에 문재인은 2012년 공무원노조 총회 축사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하고 “해고자 복직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이행,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출발이어야 한다. 또 노조할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해직자들을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 요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을 위해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 그 자신이 적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더는 참고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온전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해직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첫 출발은 11월 11일 공무원 총력 투쟁대회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조합원들의 참가를 적극 호소하며 힘을 모아 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자.

양윤석 공무원노조 조합원

아니, 세상에, 트럼프가 한국 국회 연설?

김영익

트럼프의 11월 방한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트럼프는 일본·한국·중국을 차례대로 방문하고 베트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아시아 순방을 자신의 아시아·태평양 구상을 제시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거기에는 당연히 대중국 견제와 대북 압박을 위한 공조 강화도 포함될 것이다.

일본을 방문하고 11월 7일 서울에 오는 트럼프는 문재인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회에서 연설도 할 예정이다. 그리 되면 1993년 빌 클린턴 이후 24년 만에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는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제국주의적 대북 공세로 한반도 긴장을 높여 온 장본인인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것도 분통터질 일인데, 국회에서 한반도 정책을 놓고 연설까지 하다니 기가 찬다. 진보·좌파가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을 열심히 건설해야 할 이유다.

트럼프의 국회 연설은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한다. 정부는 대북 강경 노선을 굽히지 않는 트럼프를 잘 설득해 국회 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여지를 주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변명한다.

〈한겨레〉 같은 중도진보 언론들이 갖고 있는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과거 경험을 보면, 설사 트럼프가 방한 기간에 다소 누그러진 대북 정책을 언급하더라도 상황이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2002년 1월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 2세는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한반도 긴장을 한껏 높인 바 있다.(물론 전쟁은 한반도가 아니라 이라크에서 일으켰다.) 그런데 그다음 달 한국에 온 부시는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고, 도



왜 이런 역겨운 인물에게 연단까지 줘야 하나

라산역을 방문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 인사들은 자신들의 설득 덕분이 라고 했다.

그러나 그게 ‘립 서비스’에 불과했음이 금세 드러났다. 그해 10월 미국은 별 근거 없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해 제2차 북핵 위기를 낳았다.

게다가 지금 미국 대통령은 바로 트럼프다. 각국 지도자들이 말로라도 평

화를 얘기하는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는 15년 전 “악의 축” 연설을 능가하는 초강경 연설을 했다. 그가 한국에 와서 비슷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백악관은 국회 연설에서 “대북 압박을 최대화하는 데 동참하도록 국제사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총회

트럼프의 “북한 완전 파괴” 같은 초강경 발언은 단지 말에 그치는 게 아니

다. 전략 폭격기를 비롯한 미군 전략 무기의 빈번한 전개 등 한·미 군사력을 강화하고, 거기에 북한의 돈줄을 죄는 국제 대북제재 강화를 결합시키고 있다. 지금도 미군 핵항공모함 등이 한반도 인근에 집결해 한·미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트럼프와 그의 장군들은 연일 “군사 옵션 검토” 운운하며 대북 협박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며 사태 악화에

사실상 일조하고 있다. 정세현, 이종석 등 문재인을 지지하던 햇볕정책 이데올로그들마저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너무 경도돼 있다”고 공개 비판할 정도다.

물론 최근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가 나서서 “북한 핵 위협”은 관리가 가능하며 북한을 다루는 데 외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이 한반도를 첨단무기 전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제재를 강화할수록, 북한의 반발만 부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붕괴가 가장 두려운 북한 지배자들은 “풀을 뜯어먹더라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진다. 과거 경험을 돌아봐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 행동이나 동맹 강화 등 제국주의적 공세에 나설 때 한반도에서는 서해교전이나 연평도 상호 포격 같은 예기치 않은 충돌이 벌어지곤 했다.

트럼프는 프랑스·독일 등 서방 동맹국들의 우려에도 개의치 않고 이란 핵 합의 불인증을 감행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음이 국제적으로 입증됐는데도 말이다. 이란 핵 합의가 폐기되면,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제고되는 것을 경계해 온 공화당 우익과 이스라엘이 반길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이란·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의 핵확산 통제 문제에서 오바마보다 훨씬 단호하고 강경하다는 점을 보이고 싶은 것 같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불인증이 북핵 문제에 끼치는 효과를 이렇게 지적했다. “북한은 ‘어떤 핵 합의든 미국이 계속 지키리라고 믿을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향후 북핵 문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을 평화 운동의 계기로 삼자

김영익

좌파 일각에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보며 트럼프가 오바마의 대외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본다. 일면적 견해다.

물론 오늘날 한반도 주변의 긴장은 단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역대 정부들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실행한 정책들이 누적적으로 쌓인 결과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 ‘위협’을 과장해 동아시아에서 중국 견제 전략을 펼치고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한반도는 더한층 불안정해졌다. 이 점에서 트럼프 정부도 오바마 정부와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은 오바마와 다른 점도 있다. 그 차이가

나는 효과를 봐야 한다. 당장 트럼프는 오바마의 이란 핵 합의를 흔들면서 중동 질서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오바마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특히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역량을 재배치하고자 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여러 난관에 봉착했다. 중국 등 다른 경쟁 강대국들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단지 동아시아에서뿐 아니라 중동·유럽 등지에서도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이 제기돼, 미국은 오롯이 동아시아에만 집중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구축해 놓은 기존 국제 질서에 금이 가는 한편, 미국 제국주의가 패권을 계속 유지할 해법이 딱 부러지지 제시되지 못한 가운데, 트럼프가 등장했다. 트럼프는 미국 지배자들에게 전략상의 방향 전환(이른바 “미국 우선” 정책)을 주

장했다. 그의 등장은 전 세계에, 그리고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불안정성을 높였다.

군사주의

트럼프는 군사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자신이 미국 제국주의에 제기되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보이려 했다.

올해 4월 그는 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날리고, 아프가니스탄에 핵폭탄 다음으로 가장 강력하다는 초대형 폭탄을 투하했다. 한반도에 항공모함을 보내어 전쟁 위기감을 부추기고 긴장을 높이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리고 국방예산을 크게 늘렸다. 올해 9월 미국 상원은 6190억 달러 수준이었던 국방예산을 7000억 달러(약 791조 원)로 크게 늘리는 것을 포함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그가 핵무기를 10배 증강하자고 말해서, 호전적인 그의 장군들마저 당황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당장 북한과의 전쟁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앞으로 유동적으로 만들 상호 연관된 변수들이 있다. 바로 트럼프 자신과 미국·중국의 제국주의 경쟁이다.

트럼프의 매우 강경한 말 자체가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의 말과 군사 위협은 한반도에서 군사 대치를 악화시킬 텐데, 장차 훨씬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 문제가 있다. 트럼프는 집권하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이용했다. 즉,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을 상대로 보복하겠다고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경쟁이 더 악화한다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에도 매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행운이 계속될 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이란 핵 합의가 폐기될 위험에 처한 데서 보듯이, 외교는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보장해주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

진보·좌파는 평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트럼프에 반대해, 그리고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공세에 협력하지 말라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11월 4일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는 그 운동을 건설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연합 vs 영국 어느 쪽도 진보적이지 않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 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다.

10월 19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정상회의 이후에도 브렉시트 협상은 심증팔구 진척이 없을 것이다. 상황은 단순하다. [브렉시트 뒤로도] 유럽연합에 남을 회원국 27곳은 탈퇴 협상의 대가로 영국에게서 돈을 최대한 많이 뜯어내려 한다.

그 돈이 있으면 유럽연합은 재정 지출을 대폭 감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 돈을 토해 내겠다고 한 뒤에야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의 무역 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려 한다. 이는 그 돈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다.

거울에 비춘 것처럼, 메이는 실질적인 무역 협상을 시작하고 나서 돈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래야 그 돈을 바라는 유럽연합이 영국에 우호적인 협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아무 보장도 없이 유럽연합에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며 우익 ‘짜라시’들이 자신을 물어뜯는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황은 물론 메이 자신의 약점과 보수당의 분열 때문에 악화하고 있다.

보수당 소속의 외무장관 보리스 존슨과 재무장관 필립 해먼드가 지난 몇 주 동안 벌인 일을 보라. 메이는 자신의 내각에 속한 친(親)브렉시트파도 반(反)브렉시트파도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며 유럽연합이 거칠게 나오는 듯하다. 그러나 메이가 실각하면 그 후임은 [강경 친(親)브렉시트파인] 존슨일 것이므로 유럽연합의 태도가 그리 영리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보수당 내에서 브렉시트를 두고 쟁투가 벌어지고는 있다. 하지만 양쪽 다 대처 식 [우파] 정치와 역겨운 소영국주의적 민족주의에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 좌파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연합이 손도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의 말은 힘 있는 자의 오만함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나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영국을 혐오하는 것도 아니다. 유럽인들은 제2차세계대전 기간과 전후 처리 과정에서 영국이 유럽에 해 준 일에 유럽인들은 고마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영국은 [브렉시트 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힘 있는 자의 오만함

융커는 카탈루냐 독립에 반대해 스페인 정부를 지지한 유럽연합의 입장을 정당화하면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 “카탈루냐가 독립하면 다른 민족들도 독립하려 할 것이다. 좋지 않은 일이다. 앞으로 15년 안에 유로존 소속 국가가 100개로 늘어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17개국만 있어도 충분히 힘들다. 나라가 더 많이 늘어나면 유로존을 유지하는 것

은 불가능할 것이다.”

융커는 룩셈부르크의 총리였다. 룩셈부르크는 유럽 바깥 나라에 기반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도피처 구실을 핵심으로 하는 조그만 나라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연합 회원국인데 룩셈부르크보다 훨씬 크고 인구도 많은 카탈루냐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유럽연합의 이데올로기가 급격하게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 1992년에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유럽연합이 결성될 당시, “보충성 원리”* 이념 하에 정치적 분권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

정치학자들은 유럽연합의 “다층적 협치” 특성 덕분에 기존 국민국가에 속한 [자치]지역들이 자율성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스코틀랜드나 카탈루냐 같은 곳의 민족주의 운동이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를 가진 채 독립국이 되려고 추구하는 것을 고무했다.

카르텔

그러나 유럽연합이 그리스와 카탈루냐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유럽연합은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 통화공동체를 지탱하는 데에 여념이 없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카르텔임을 알 수 있다. 융커가 카탈루냐 독립을 유로화에 대한 위협이라 규정한 것을 보라.

이런 입장에는 나름의 논거가 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은 유로존의 경제적 통합성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유럽연합의 종주국적인 독일은 유럽연합이 긴축 정책을 더 중앙집권적으로 강제하는 것만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이 감독하는 항구적 긴축 체제 하에서 “보충성”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 유럽중앙은행 · IMF의 “트로이카”가 유럽연합 소속 채무국들에 보낸 “연대”의 결과로, 미국 · 독일 · 유럽연합 소속 신자유주의적 기술관료들이 채무국들에 감 나라 배 나라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봤다.

이런 더 큰 변화에 견주면 브렉시트는 새 발의 피처럼 보인다. 영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5위인 제국주의 열강이다. 영국은 자기 자신을 돌볼 만큼은 강력하고 추잡하다. 브렉시트 협상에서 유럽연합과 대립하는 영국에 공감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추잡한 결별에서 유럽연합이 진보적인 편이라 여기는 것도 자기 기만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76호 / 번역 김준호

용어설명

보충성 원리

연방제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최소 단위인 소속국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리. 연방의 권한을 분산하고, 최소 단위의 정치 공동체(국가)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해 상위 단위(연합)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1975년 유럽위원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내건 원리다.



좌파적 노조의 선제적 제안이 중앙정부의 탄압에 대한 분노와 맞물려 성사된 10월 3일 카탈루냐 총파업

카탈루냐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민족 독립 운동이 계급투쟁과 결합돼야

카탈루냐의 수도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 **데이비드 카발라**아래 사진가 카탈루냐 독립과 관련한 소식을 전한다. 이 인터뷰는 한국 시간으로 10월 15일 밤 **김종환** 기자가 했다.

스페인인의 최근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푸지데몬이 10월 10일 국회 연설에서 독립 실시 유보를 선언하며 후퇴한 직후에는, 독립운동 내 주요 단체 2곳(카탈루냐국회와 ‘옴니움 쿨투랄’)이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개헌을 놓고 지지부진한 협상에 들어가며 투쟁을 끝내려 한다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동안 벌어진 일을 보면 그리 되지는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가 양극단 중 하나의 선택만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카탈루냐가 독립 선언을 철회하면 그간의 일을 모두 잊겠다며 완전한 투항을 요구한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중앙정부는 카탈루냐 자치권을 박탈하고 경찰과 교육 시스템을 직접 관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교육 시스템 장악은 ‘스페인인의 가치’를 주입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발이 크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까지는 절충적 해법이 보이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하려 한다고 의심을 받은 두 단체도 후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탈루냐에 기반을 둔 반자본주의 선거연합 민중연합(CUP)도 계속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라 말하고 있다.

물론 그리스 시리자가 굴복한 사례에서 보듯 전혀 예상치 못한 후퇴를 거듭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은 아래로부터 운동이 분출하면 이를 더 두려워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CUP에 대해서 더 말해 달라.

약 2000명 정도로 이뤄져 있고 노동조합 활동가,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 프랑코 독재 시절부터 싸워 온 투사 등 다양한 활동가들이 모여 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300명 정도 된다.

이들 가운데 단일 세력으로는 2개의 스탈린주의 단체가 가장 크다. 각각 ‘3기 노선 스탈린주의’와 ‘인민전선주의 스탈린주의’라 부를 만하다. 인민전선주의 스탈린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세력과의 관계에 몹시 연연하지만 아직까지는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에서 이탈할 조짐은 없다.

두 세력 다 100~200명 규모다. 그 둘을 합해도 전혀 다수는 못 된다. 아나키스트와 트로츠키주의자도 있다.

2015년 선거 이후 들어선 현재의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CUP의 지지 투표 덕분에 카탈루냐 의회에서 과반을 유지하고 정부를 유지하고 있다.[총 135석 가운데 여당은 62석, CUP은 10석] 그러나 CUP은 자치정부가 독립 선언을 계속 미루면 의회 활동을 보이콧하겠다고 최근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압력을 넣은 것이다.

앞으로 주시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해 달라.

만일 자치정부가 계속 버티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물리적 탄압을 가하거나 자치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나오면 카탈루냐 대중의 반격이 클 것이다. 반면 자치정부가 더 후퇴해서 배신적 타협을 하면, 좀더 까다로운 상황은 더 급진화하고 정치적으로 날카로워질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국민투표에 맞춰 CUP의 호소로 ‘국민투표를 사수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연합’이 결성됐고, 기층에서는 이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있다. 만일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독립운동의 더 큰 단체들이 굴욕적으로 타협한다면 CUP가 거기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결집할 수 있다.

나는 CUP 안팎의 급진적인 활동가들과 함께 독립운동이 노동계급의 쟁점, 인종차별의 쟁점 등 사회적 쟁점을 더 많이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호 온라인 기사 ‘카탈루냐 민족주의와 독립 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도 함께 보시오.



마르크스주의 특수용어 추수주의란 무엇인가?

최일봉

근래 우리는 운동 안에서 꿈무니 쫓기(이하 추수주의) 현상을 자주 본다. 예를 들어,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 교·강사의 정규직화 문제를 놓고 심지어 많은 좌파 활동가들도 조합 내의 대세를 쫓는 모습을 보였다.

대학교 학생회장인 좌파 학생운동가들은 학생회 지지자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 교·강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기를 삼갔다. 비록 그들의 소속 정당은 그 운동을 지지했지만, 당이 당원에게 당 방침 실천의 책임을 강요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건설노조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많은 좌파 활동가들조차 단속 불가피 여론을 거스르기를 삼갔다.

일부 초(超ultra-)페미니스트들이 성폭력 개념 과잉 확장에 더하여 ‘2차 가해’라는 도덕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개념으로 토론을 억눌러서 못하게 하는 것이 그동안 여성 운동 안에서 대세였다. 이런 관행이 결정적인 형세를 이루는 데에는 진보·좌파 운동가들의 추수주의도 일조했다.

그밖에도 곳곳에서 추수주의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레닌은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불세비키/멘세비키 분열을 돌아보며 1904년 2~5월에 《일보 전진, 이보 후퇴》라는 저작을 썼다. 거기서 그는 멘세비키의 추수주의를 이렇게 정의한다. “계급 전체나 거의 전체가 자본주의 하에서 한 번이라도 계급의 전위,

즉 계급의 사회민주주의적[당시 이 용어는 혁명적 사회주의를 뜻했다] 정당 의 의식 수준과 활동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멘세비키는 당과 계급을 동일시했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당(물론 혁명적 당)과 운동의 차이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반대해 레닌은 오직 혁명가들과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정치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으로 개혁주의 정당은 — 좌파적인 종류일지라도 — 노동계급 전체의 관념을 수용하려는 정치조직이다. 이런 뜻에서 그 당은 계급을 나타낸다.(계급의 표본이다.)

이에 반해 레닌은 “당[물론 혁명적 정당]이 계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꿈무니

루카치는 《역사와 계급의식》(1923)에서 추수주의를 가장 탁월하게 비판했다.

추수주의는 객관적 사태 전개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노동계급 의식의 가장 선진적인 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수준에 순응하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이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만으로도 계급의 의식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을 상정한다.(그런 생각은 사회학 저작들에 흔한 실증주의적 가정이다.) 그러나 주관성(조직, 의식, 싸움 태세 등의 요인들)과 객관성(경제·정치·사회 상황)은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때로 역사적 과정에 의해 ‘역사적 계기’가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런 계기는 역사적 과정의 근본적인 추세들이 굽아서 터질 듯해져, 인간 행동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이다.

1917년 10월 러시아 상황이 두드러진 사례일 것이다.(그래서 레닌은 봉기의 기예技藝art에 대해 말했다.)

결국 그런 ‘역사적 계기’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역사적 과정이,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다. 객관적 상황은 주관적 행동의 영향을 일부 받는 것이다.

주관성과 객관성의 이러한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혁명적 정치조직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운동주의’(운동 만능)로 기울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지나친 좌익주의’(전술 없는 앙상한 원칙뿐)로 기운다.

혁명가들은 노동계급의 의식이 성숙해지는 때를 고대하면서 선전 활동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이 성숙한 계급의식을 갖는 것은 전혀 필연이 아니다. 루카치 말처럼, “역사 과정에서 주관적[주관적 요인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뜻에서] 계기들이 능동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순간은 있을 수 없다.”

혁명가는 능동적으로 “노동계급의 의식을 현재의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 관여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숙명론이나 기회주의를 버리고, “비교적 드러나지 않는 계기들”에 응답한다.

혁명적 조직과 노동자들의 관계는 이러한 ‘계기들’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이루는 과정, 그러나 의식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운동 안에서 소수 혁명가들의 조직이 하는 구실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혁명적 당의 구실은 주관성(인간 의지)과 객관성(물질적 조건들)을, ‘당위’와 ‘존재’를, ‘가치’와 ‘실재’를, 궁극적 목표와 당면 과제들을 매개하는 것이다.

혁명가들은 ‘주관적 계기들의 연속으로서의 역사적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한다. 그저 대세를 추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허용된 한계 안에서 매 순간 정치적 영향력을 구축해야 한다.

‘되지도 않을 일을 무슨!’ 하는 식의 숙명론적·객관주의적 체념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도 안에서 가능한 성과를 내고자 애써야 한다. 정치적 지도력은 힘들게 싸워서 얻는 것이다.

추천 책



당과 계급: 노동계급에게는 어떤 정치조직이 필요한가?
레온 트로츠키 외 지음, 책갈피, 2012 중
크리스 하먼의 논문 ‘당과 계급’.

역사와 계급의식
죄르지 루카치, 조만영·박정호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38,000원
(비싸므로 도서관에서 대출하시면 될 것)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 선언

시리아 영토 장악 위해 이란과 대립각 세우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 점차 대립각을 세우는 배경에는 시리아를 둘러싸고 두 국가가 서로 얹치락뒤흔치락하는 것이 있다.

10월 13일 트럼프는 백악관 연설에서 이란에 새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 개발을 제약한 2015년 합의를 이란이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또 이렇게 말했다. “이란은 여전히 세계적 테러 후원국이다. 알카에다·탈레반·헤즈볼라·하마스 등 여러 테러 단체를 지원한다.”

이는 미국과 이란이 배후에서 지원하는 세력들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가 점령했던 시리아 영토를 서로 가져가려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을 반영한 말이다.

10월 15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아이시스가 점령한 시리아 동부의 락카를 탈환하는 “최후 결전”에 돌입했다.[그리고 17일 락카를 탈환했다



시리아는 2014년 미국의 개입 이후 더한층 지옥이 됐다

고 밝혔다.]

올해 6월 미군 공습을 비롯한 공격이 시작된 이래로 락카에서 시리아인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한편 이란의 후원을 받는 세력들은 이라크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의 데이

르에조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이란은 이라크·시리아 일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우고자 한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이란이 “위협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계속하

고 있으며 … 사악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란 정부군의 일부인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대한 새 제재 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최근에는 시리아 정부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위협

트럼프는 13일 연설에서 2015년 이란 핵 협상을 “불인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곧 핵합의를 파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미국이 그 합의에 충실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2015년 이란과의 핵합의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이란은 핵 개발을 자제하고 사찰을 받아들여야겠다고 동의했다. 이란 핵합의는 당시 오바마 정부가 이

란의 영향력 확장을 막는 한편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이 약해진 상황에 대처하려는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트럼프 등 미국 공화당 강경 우파들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항의에 직면했다.

영국·프랑스·독일은 합의를 파기해선 안 된다고 트럼프에게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의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도 핵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현재] 합의 사항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합의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 낫다며 트럼프의 말을 ‘톤다운’ 시키려 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동에 대한 통제력 확보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이란과 대립각을 키우게 될 것이다. 그럴수록 [중동에] 혼돈의 피바람을 불러올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576호 / 번역 김준호



서평 | 《러시아혁명사 강의》, 박노자, 나무연필, 16,000원.

오류와 혼란투성이 러시아혁명사 책



이정구

박노자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강의한 것을 수정·보완해 《러시아혁명사 강의》를 출간했다. 그래서 박노자의 이전 글들을 본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때 “어디서 봤더라?”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눈치 빠른 사람은 짐작했겠지만, 이 책에서 박노자는 러시아 혁명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나 분석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주장들, 그것도 잘못된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박노자는 레닌의 초기 사상의 이론적 골자 중 하나가 전위당론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전위당은 “당의 상층부에 직업적 혁명가가 있어야” 하고 “그 아래에 당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하고 당을 위해 헌신하는 준직업적 혁명가들이 당원으로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은 사회민주주의부터 우익에 이르기까지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두 공유하는 레닌주의 정당론에 대한 전형적인 왜곡이다.

그런데 책의 다른 곳에서는 “레닌조차도 러시아 혁명 이전에는 볼셰비키 정당을 좌지우지하지 못했”으며, “상당히 역동적으로 조직성과 민주성을 결합해 당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혁명 이후인] 1920년 9차 당대회까지만 해도 볼셰비키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원칙을 지켜나갔”다고 지적한다. 앞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이다.

트로츠키에 관한 장은 왜곡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트로츠키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한계 많은 존재로 보았고, 따라서 공포 없이는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 트로츠키는 “무산계급의 독재도 결국 인간을 다스리는 정권인 이상 공포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으며, “국가가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역사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박노자는 트로츠키의 반스탈린 투쟁, 혁명을 지키려 한 러시아 노동자들의 노력을 제대로 살펴주지도 않는다

박노자는 이런 왜곡과 편견에 머물지 않고 트로츠키를 스탈린과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비운의 인물쯤으로 묘사한다. “결국 레닌은 사망하고, 트로츠키는 그때부터 당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지요.”

하지만 역사가를 자처하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당내 투쟁의 배경이 됐던 수많은 쟁점들, 즉 러시아 내부에서 공업화 전락과 농업 정책, 독일·중국 혁명에 대한 대응, 파시즘 문제, 코민테른의 여러 정책 등은 러시아 혁명과 더 나아가 세계 노동자 계급의 진퇴를 두고 벌인 갈등이었고, 국제주의나 아니면 일국 사회주의나 하는 노선의 대립이었다. 그런데 박노자는 이런 쟁점을 쏙 빼놓은 채 트로츠키를 권력욕에 눈먼 사람쯤으로만 묘사하고 있다.

직무 유기

그렇다면 박노자는 “스탈린 독재로 넘어가면서 당의 안팎은 물론 나라 전

체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만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 “전쟁을 조직할 만큼 강력한 중앙집권을 추진한 국가가 세워졌다면, 과연 그 국가의 체제가 노동자들의 직접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던지고는 이것을 ‘레닌의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레닌과 볼셰비키 그리고 혁명을 수행한 노동자 대중이 연합군의 침략과 백군의 저항에 맞서 노동자 혁명을 지켜 내고자 했던 노력들에 대한 합당한 평가는 그의 책 어디에도 없고, 국가는 필연적으로 노동자 민주주의를 억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아나키즘적 평가만 남아 있다.

정작 그가 제시한 대안은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이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아주 격렬하지만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반항” 같은 개혁주의적 방안이다. 그런데 이런 개혁주의적 대안이 잔혹하고 무자비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좌충우돌하고 동요하다가 더 급진적인 대안에 자리를 내주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못해 오히려 반혁명의 피의 수렁에 빠져 버린 사례가 역사에 자주 등장했다. 게다가 박노자 본인은 국가가 폭압적으로 주도한 이른바 스탈린 체제의 “적색개발주의”를 적극 옹호한다. 이처럼 ‘박노자의 모순’이 오히려 문제 아닐까?

박노자가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을 ‘정치 신학’이라고 비판하면서 제시한 대안은 적색 개발주의다. 그런데 적색 개발주의의 대표 사례인 소련을 보면, 도무지 왜 그런지 이해하기 힘든 묘사들이 계속 나온다. “소련도 중앙집권적 정치가 강력하게 작동했던 1950년대가 경제 황금기였습니다. … 적색 개발주의의 정치적 역동성은 이후 문제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련에서는 관료제가 다소 분산되었어요. … 집권 세력의 위계질서적 통제가 강할 때 적색 개발주의 체제는 비교적 잘 운영되지만, 그 통제가 약화되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노동 생산성의 증가 폭도 작아지면서 개발이 주춤해지는 겁니다.”

박노자의 말대로라면, 소련의 집권 세력이 왜 통제를 늦추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만들었을까 하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후에라도 통제를 재강화하는 쪽으로 국가 운영 방향을 되돌렸으면 효율성이 회복됐을 것인가 하는 물음과 함께 말이다.

이 물음에 대해 그가 ‘정치 신학’이라고 조롱했던 국가자본주의론에서는 세계자본주의 하에서 자본들 사이의 경쟁을 그 이유로 꼽는다.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 체제, 중국의 마오쩌둥 체제, 그리고 수많은 저개발국들이 압축적 성장 또는 국가 주도 성장을 추진한 배경에는 세계 자본주의가 그 국가들에게 가하는 압력과 생존을 위한 자본 축적이라는 요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스탈린주의 체제는 초기의 고성장 이후에 자본주의 고유의 비효율과 이윤율 저하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

다. 적색개발주의론은 이런 점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박노자는 적색개발주의론에 대한 비판에 약간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 그 이유는 스탈린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그 시대를 살면서 온갖 고통과 착취를 감내했던 민중에 대한 비판과 혼동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적색 개발주의 하에서 완전고용, 무상으로, 상당히 좋은 생활 조건 등을 보장해 줬으므로 신자유주의 사회보다는 더 낫다고도 여긴다. 그래서 박노자는 스탈린주의 체제가 사회주의와는 구분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옛 소련과 북한 또는 중국 같은 사회를 옹호한다.

반면, 박노자가 속한 노동당은 북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런데도 그당이 북한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박노자를 비판하지 않는 것은 그의 영향력 없음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노동당의 무원칙함을 뜻하는 것일까?

박노자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좌파적 주장을 펼치면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한국에 살았다 해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1987년에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데 가장 큰 동력이 되었던 것은 부르주아 세력이 아니라 급진화된 중간계층의 일부였던 학생들”이라는 구절이 이를 잘 보여 준다.

6월 항쟁을 떠오르게 하는 묘사인 듯 하지만, 사실을 온전하게 진술한 것이 아니다. 6월 항쟁 기간에도 갈수록 기층 민중의 참여가 두드러졌지만, 무엇보다 7~9월 노동자 투쟁을 1987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묘사하기 때문이다.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러시아혁명에 관해 생생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존 리드가 쓴 《세계를 뒤흔든 열혈》(책갈피)이나 트로츠키의 《러시아 혁명사》(풀무질) 같은 고전을 권하고 싶다.

한국GM 위기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강동훈

10월 16일, 한국GM의 2대 주주(지분 17퍼센트)인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자산 처분 거부권’이 소멸되면서, 조만간 한국GM이 공장 폐쇄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2년에 산업은행은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면서, “15년간 한국GM 총자산의 20퍼센트 초과분을 팔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효력이 16일 끝난 것이다. 즉, 법적으로 GM은 언제든지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됐다.

GM이 당장 한국 철수를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단계적 공장 폐쇄를 추진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한국GM의 구조조정은 전 세계 GM 구조조정의 일부다. GM은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해외 자회사 매각과 시장 철수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이후 호주·인도네시아·러시아에서 잇달아 공장 문을 닫았고, 올해 3월에는 유럽 자회사인 오펔을 프랑스 PSA(푸조·시트로엥)에 넘기고 유럽 시장에서마저 철수했다(관련 기사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5월에는 인도 내수 시장에서 판매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GM은 미국에서도 생산 차량 구조조정을 위해 공장 일부를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그 속에서 한국GM도 심각한 불확실성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GM이 유

럽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한국GM은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한국GM의 수출은 2012년보다 약 80만 대(반조립제품 포함)나 줄었다. 이에 따라 한국GM 군산공장의 가동률은 20~30퍼센트 수준으로, 부평2공장 가동률은 60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현재 군산공장의 가동일은 한 달에 주간 1교대 7~8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부평공장에서 생산했던 알페온의 후속 차종으로 임팔라를 수입해 판매한 데 이어, 최근에는 캡티바의 후속 차종으로 에쿠녹스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부평공장의 생산 차종은 말리부, 트랙스, 아베오 3종으로 준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자동

차 회사들에게 미국 내 생산을 요구하고, 한미FTA 재협상을 밀어붙이면서 자동차 부문을 개정이 필요한 분야로 지목한 점 등도 한국GM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GM이 매년 스파크·트랙스 수십만 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은행은 ‘한국GM의 공장 철수를 막기 어렵다’고만 하고 있다. 거부권이 사라졌고 지분도 적어 철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한국GM을 제대로 감시·감독하며 일자리를 지키는 데는 큰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GM 철수는 한국GM 노동자 1만 5천여 명과 협력업체 노동자 30만

명의 고용과 임금을 위협하는 문제다. 따라서 한국GM 문제를 산업은행에만 맡겨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노조 동의 없이 산업은행의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GM에서 일자리 보호를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GM이 고용을 보장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일자리를 지키려면 국유화를 요구하며 지금부터 투쟁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7면으로 이어짐



정부가 국유화해서 일자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한국GM은 GM본사의 '의도된 부실'이다

한국GM 철수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2016년 동안 발생한 한국GM의 순손실은 2조 원에 육박한다. 올해 1분기 역시 손실을 기록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보수 언론들은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며 한국GM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고임금 노동자들이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한국GM의 위기가 노동자 탓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다. 한국GM의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11.4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는 현대차(15퍼센트)보다 낮다.

한국GM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근본 원인은 GM본사가 2013년에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철수를 결정하고 최근 오펔마저 매각하면서, 한국GM의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GM 본사가 한국GM을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GM은 2011년 7000억 원 정도였던 차입금이 최근 3조 원 가까이로 급증했다. 차입금 전액을 GM으로부터 빌렸는데, 이자율이 4.8~5.3퍼센트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회사채 금리(2~3퍼센트)보다 높다. GM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고금리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GM이 빌린 돈 중 1조 5000억 원은 GM이 대우자동차를 살 때 산업은행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는 데 쓰였다. 나머지 차입금도 대부분 유럽·러시아 시장 철수에서 발생한 손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됐다. GM본사가 철수를 결정했는데 그 비용은 한국GM에 떠넘긴 것이다.

게다가 한국GM은 적자를 내기 시

작한 2014년부터 갑작스럽게 '최상위 지배자의 업무 지원' 명목으로 GM본사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4~2016년 동안 지급한 금액만 1297억 원에 이른다.

GM본사가 한국GM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을 키운다고 지적받는 또 다른 사례는 바로 '이전가격' 문제이다. 이전가격이란 해외 회사와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하는데,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싸게 구입하거나 자회사에게 비싸게 팔면, 본사의 이윤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전가격 문제는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훨씬 높은 것에서 나타난다. (매출원가율은 전체 매출액 중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원가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은 낮아진다.)

지난해 한국GM 매출원가율은 93퍼센트다. 이는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매출원가율(80~84퍼센트)보다 훨씬 높다. 한국GM 매출원가율은 2013년 86.4퍼센트에서 2014년 90.2퍼센트로 올랐고, 2015년 96.4퍼센트까지 치솟았다. 2년 사이 매출원가율이 10퍼센트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GM은 2013년 이전가격 등이 문제되면서 국세청에 추징금 273억 원을 물기도 했다.

반면, 한국GM은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데, 그에 따른 보상은 계속 줄고 있다. 최근 7년간 연구·개발비로 매년 평균 6100억 원을 사용했지만, 기술지원 라이선스 수익은 2010년 2464억 원에서 지난해 361억 원으로 급감했다. 한국GM이 개발한 최신 기술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 GM본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GM본사가 만들어 낸 부실과 경영난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져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부산퀴어문화축제 우익의 성소수자 혐오를 반박한다

[편집자 주] 지난 9월 23일 부산에서는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였음에도, 당일 2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버스 행사에 참가하고, 활력 있게 행진을 하는 등 성공적으로 축제가 개최됐다. 노동자연대 부산지회는 축제 이전부터 부산대 내에 부산퀴어문화축제에 함께 참가하자고 주장하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성소수자 해방을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성소수자 운동에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당일 행사에서도 참가자들에게 '자유한국당 등 우익의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함께 싸우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난 후 부산대 학내에 "이번 퀴어퍼레이드를 보면서 드는 궁금증...", "노동자연대가 쓴 자보를 곱씹어보니..." 하는 익명의 대자보들이 붙었다. 그 내용은 노동자연대 부산지회가 발표한 부산퀴어문화축제 참가 호소 대자보에 대한 비난이었다.

노동자연대 부산지회는 10월 16일 이를 반박하는 대자보를 발표했다. 아래에 내용을 싣는다.

최근 학내에 "이번 퀴어퍼레이드를 보면서 드는 궁금증...", "노동자연대가 쓴 자보를 곱씹어보니..."라는 익명의 대자보들이 붙었다. 그 내용은 노동자연대 부산지회가 발표한 부산퀴어문화축제 참가 호소 대자보에 대한 비난이었다. 그 대자보는 성소수자들이 일상에서 받는 억압과 차별이 허구이며, 오히려 혐오 세력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먼저, 다른 단체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해 비판하면서 자신은 누군지도 밝히지 않는 비검함과 무책임함이 놀랍다. 그런데 이 자보를 부착하는 모습을 목격한 한 교수님이 그 사람들의 신분을 물으니, '길원평 교수 신우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길원평 교수가 누구인가? 길 교수는 현재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이미 부산대에서 여러 차례 성소수자 혐오 자보 부착과 강연회 개최로 학내 구성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는 동성애 혐오 교수다. 길 교수는 부산퀴어문화축제 당일 그 맞은편에서 열렸던 맞불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 길 교수 이름으로 쓰면 이미 그의 동성애 혐오적, 우파적 전력을 익히 아는 학생들이 아무도 안 읽을까 봐 걱정했던 것일까.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악성 왜곡과 혐오를 퍼뜨리며 열렬히 활동하는 자들이 자신의 본모습을 가린 비검한 시도일 뿐이다.

이들 대자보의 주장과 근거도 빈약하다. 이를테면 공공장소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일상에서 받는 차별이랄 게 없고,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동성애가 에이즈를 확산시킨다", "동성애는 성 중독이다" 따위의 팻말을 들고 인간따위기를 한 혐오 세력에게 항의한 것이 또 다른 혐오라는 것이다.

혐오는 단순히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다. 성소수자들이나 이민자 등에 대한 혐오는 체계적으로 부추겨진다. 한국에는 여전히 합당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이 남아 있고 올해도 그 법에 의해 한 성소수자 군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성소수자 가족들은 그 법적 결합을 인정받지 못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할 수 없다

해 연인의 수술이나 죽음 등의 중대한 일에서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된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존재를 숨기고 살아가는 데에 대한 고통, 직장 등 고용에서 받는 차별 등은 그들의 삶을, 존재를 위협한다.

혐오 선동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결과(2014)에 따르면 응답자의 41.5퍼센트는 차별이나 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한다. 성소수자들의 자살과 자해시도는 위험한 수준인데 전체 응답자의 28.4퍼센트가 자살을, 35퍼센트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차별을 더욱 강화하는 혐오 선동에 항의하는 것이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구제받을 최소한의 장치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것이다. 퀴어퍼레이드는 364일 동안 숨죽였던 성소수자들이 벽장 속으로 나와 잠시 해방감을 맛보는 날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비판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일이라는 주장도 황당하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억압을 정당화하는 표현과 행동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할 수 없다. 어떻게 억압이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겠는가?

또한 기독교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를 비판한 게 "특정 종교 비판"이라는 주장도 쟁점 비틀기일 뿐이다.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성소수자

를 포용하고 환대하는 조직들은 부산퀴어퍼레이드에도 적극 참가했다. 오히려 본인들이야말로 자신만이 기독교 교리를 독점할 수 있다는 지독히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들이 "노동자연대와 성소수자는 도대체 무슨 관계"(오타는 원문의 것)냐며 노동자연대의 대자보를 꼭 짚어 비난한 이유야 말로, 이들의 진정한 목적을 보여 준다. 바로 부산 지역에서도 넓어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부산퀴어퍼레이드엔 성소수자 당사자도 많이 참가했지만, 지지자들도 대규모 참가했다.

이런 성공적 동원에 혐오 세력들이 적잖이 열받았을 것이고, 어떻게든 이 성과를 흡입 내며 운동을 이간질하고 싶은 것일 게다.

노동자연대는 노동자들의 착취에 반대하고, 더불어 모든 종류의 차별과 억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둘은 서로 연결돼 있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사람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은 서로 연결될수록 강력해진다. 노동자연대가 성소수자들이 스스로의 자긍심과 권리를 말하는 행사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 참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노동자연대는 이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성소수자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고, 차별과 억압을 끝내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2017년 10월 16일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계획 발표

생리대 안전 대책 마련하라

전주현

식약처의 '1차 생리대 전수조사' 발표 오류가 드러난(관련기사: 본지 224호 '식약처의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오류가 금세 드러나다') 직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생리대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6개 세부 분야(피해사례, 국내외 사례, 노출정보 정리, 의학적 개연성 등)를 분석해 건강영향조사의 필요성과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리대에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처는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생리대 전 성분 표시제 의무화 법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그 동안 여성들은 생리대에 사용된 성분이 무엇인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유해성 논란이 있는 생리대를 사용해 왔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영향조사와 '전 성분 표시제' 실시 계획이 발표된 것은 다행이다.

이는 정의당과 여성환경연대 등 진보적인 여성·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항의하고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인 덕분이다. 정의당은 9월초부터 "생리대 안전성 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청원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 서명은 환경부에 제출됐고,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청원 내용의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철저한 조사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계획이 발표된 것은 다행이지만, 제대로 조사하려면 조사의 주체와 내용, 방식도 중요하다.

제대로 된 생리대 유해성 조사는 생리대 안전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규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작업이다. 현재 식약처의 생리대 성분 규제 기준은 20년 전 것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비롯한 독성 물질은 규제 대상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유해성 조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독성 생리대 논란 뒤흔에 급급한 식약처는 생리대 유해성 조사를 맡을 자격도 능력도 없다. 기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관련 부처들끼리 기업의 눈치를 보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문제를 키운 전례를 볼 때, 다른 정부 부처들도

신뢰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정의당은 옹게도 "민·관 공동 역학조사"를 요구해 왔다. 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생리대 기업을 대변할 친기업적이고 우익적인 인물이 아니라, 독성 생리대 문제를 앞장서서 제기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해 온 진보운동 측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리대의 화학물질이 여성의 피부와 생식기로 직접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사 방법(임상 조사와 역학조사 등)이 필요하다.

안전한 생리대 대책

생리대 기업들이 모든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다. 그간 이들이 생리대 성분 공개 의무 면제 뒤에 숨어 무슨 재료를 썼는지 알 수 없었다. 생리대 기업들은 구멍이 숭숭 뚫린 식약처의 규제 기준과 허술한 허가 제도만 믿고 뻔뻔하게도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강변해 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매우 불충분하다. 이윤에 혈안이 된 기업들이 성분 표시제만으로 알아서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건강영향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독성 생리대를 강력히 규제하지 않은 채 여성 개개인들의 선택에만 맡긴다면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여성의 질 점막은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생리대 독성 물질이 소량이라 할 지라도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생리대 성분에 대한 규제가 훨씬 엄격해져야 한다.

한편 기업들이 안전한 성분으로 바꾼다면 가격에 상당히 인상한다면, (부유한 여성들은 별 타격이 없겠지만) 노동자와 서민 여성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울며 겨자 먹기로 독성 생리대를 계속 써야 할 수도 있다. 지금도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 값을 감당하지 못해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쓰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의 이윤 때문에 여성들의 건강이 희생돼선 안 된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생리대 문제는 여성의 문제이자 계급의 문제이다.

정부는 생리대 유해 물질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더불어, 안전하면서도 값싸고 편리한 생리대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 인상을 규제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는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생필품인 만큼 적어도 저소득층에게는 무상 공급 해야 한다.

철저한 유해성 조사와 더불어 독성 생리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자.



기업의 이윤에 여성의 건강이 희생돼선 안 된다 9월 28일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출범식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트럼프의 막 나가는 인종차별 정책
- ★ 카탈루냐 민족주의와 독립 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 ★ 박근혜 재판과 구 여권 수사 우익의 신경질과 문재인인의 줄타기
- ★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심포지엄 데이비드 하비와의 논쟁
- ★ 민중당 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에 3만 명 참여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 환송해야
- ★ 대전·서울 을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파업 정당하다!
- ★ 평화 운동이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해야만 대중적 지지를 받을까?
- ★ 한국의 성소수자 등 59개 단체가 이집트 정부의 성소수자 탄압에 항의하다
- ★ 기회주의자의 가치관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 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융·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